

## 보건복지예산



金龍文  
보건복지부 차관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은 약 2조 8500억원으로 정부 전체예산의 4.2%에 해당한다. 주택, 지역개발, 근로복지 등을 합친 사회보장예산규모는 정부전체예산 대비 6.2%, GNP 대비 1.0%에 불과하여 OECD국가중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도 기본골격은 마련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국민연금시대는 1998년 7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제도상의 개선여지가 많고 의료보험급여수준도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이 나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복지는 경제를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되며 복지없는 생산활동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정책은 시간표가 필요하다. 1996년 2월 국민복지기본구상이 발표되면서 복지의 큰 틀이 짜여지고,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웃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종합적인 장기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다보니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형성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 발전 5개년계획을 조속히 수립,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수립 못지 않게 사업의 평가가 중요하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능력은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례답습의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제로베

## 과 정책과제

이스에서 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조직은 대폭 정비하여 군살을 빼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 최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직진단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도가 보건복지분야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산망 구축과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수입식품관리, 의약품 안전성 평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자원봉사정보 관리 및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등 그 어느 분야도 정보화가 필요치 않는 곳이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보건복지업무의 선진화를 기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통계의 전산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복지지수를 높여야 한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보장,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대책, 질높고 편안한 의료서비스 제공, 암등 성인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관리, 노후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 등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출범, 의료보장의 내실화, 도시자영자 연금의 실시 등과 관련된 민생복지 예산은 최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과 중앙의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의 일차적인 관심은 복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야호로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다. 근래 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훨씬 높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경우 중앙정부의 총괄적인 관

리가 필요하나, 지역의 특정 복지시책은 마땅히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보건의료산업의 매출규모는 GNP대비 10%수준으로 그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 예상되고, 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의 품질개선은 경쟁력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